

국제리뷰



-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와 성 인지적 원조
정 혜 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도미니카 공화국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문화개선 KOICA 사업
- 제1차 초청연수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김 영 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장
- “시아 법”과 젠더 - 아프가니스탄 “시아 법” 논쟁을 중심으로-
곽 숙 희 |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와 성 인지적 원조

정 해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지난 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2011년 서울에서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제 막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 가입을 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조의 규모도 작고, 특히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 정부로서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제4차 회의는 OECD/DAC에서 원조효과와 성평등을 위한 추가 지침서를 채택한 결과를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성 인지적 원조를 위해서도 많은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와 이와 관련한 젠더 논의를 소개하고, 바로 지난 2008년 9월에 개최되었던 제3차 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검토해본다.

우리나라에게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개발원조는 서구 전통적 공여국에서는 몇 십 년의 역사를 두고 논의되어 온 것이다. 개발원조 분야가 성장하면서 국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공여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게 되었으며, 공여기관과 프로그램은 세부 주제별로 전문화되었다. 공여기관은 저마다의 개발(development)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분야별로 원조의 중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공여기관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요청서나 보고서 등의 문서를 세련화하고 사업 절차를 세분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원조를 지원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기금에 따라 상이한 각종 형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와 숫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원조 효과(aid effectiveness)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공여기구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수원국과 함께 논의한다면 원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조 효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2002년 채택된 몬테레이 합의문(Monterrey Consensus)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국제개발재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개발원조를 증대하고 또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효과적인 원조 집행을 꾀하여 UN 새 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MDG란 UN에서 21세기를 맞아 2015년까지 달성

할 계획으로 꼽은 8개의 개발목표를 일컫는 것으로 18개 세부항목과 40여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MDG 3번은 성평등과 여성권한 증진을 목표로 하며, 세부목표는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률의 남녀 성차를 해소하고, 2015년까지 모든 등급의 교육에서 성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지표는 초·중·고등 교육의 성비, 비농업 분야 유급 노동 여성 고용율, 의회 여성 의석 비율인데 이들 지표에 따르면 교육에서 2005년 세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113개국이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2015년 세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여성의 의회 의석률은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가장 낮은 경우는 2.5%까지 기록하며 심각성을 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불안정한 저소득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형태는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노동이다. 이처럼 성 불평등은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제한하고, 이들의 빈곤탈출은 물론 나아가서 이들의 가정과 사회,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 외에도 여성의 목소리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차별과 폭력을 심화하는 정치·사회·문화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성평등은 개발의 주요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몬테레이 합의문이 채택된 이듬해, 로마에서는 제1차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가 개최되었다. 국제기구,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국제금융기관, 국제구호기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원조관리와 원조효과를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 조화를 위한 로마 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은 공여국들이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당사국에 대한 사업을 조화롭게 조정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회의에서는 원조 조화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구체화되어, 원조 효과의 증대를 위한 5대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동 회의에서 채택한 원조 효과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은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논의에 박차를 가하였다.

파리 선언은 공여국과 수원국이 대등한 협력자로서 개발원조를 함께 계획, 집행할 때 효과적이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하고, 성장과 역량 구축을 도모하며 MDG 달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리 선언의 5대 원칙은 (1) 수원국의 주인의식 존중 (2) 수원국의 국가발전계획과의 일치 (3) 공여국 간의 조화 (4) 성과중심적 관리 (5) 상호 책임 강조이다. 파리 선언에서 강조하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동반자적 관계는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empowerment)를 비롯한 MDG의 달성을 촉진한다. 또한 이 같은 5대 원칙에 따른 개발계획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여 저개발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전제로 한다.

작년 9월에는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급회의에서는 파리 선언의 원칙이 행동 지침으로 구체화되었다. 130여 개국 정부를 비롯 여러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전문가 약 1,500여명이 참가한 동 회의에서는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AA: Accra Agenda for Action)이 채택되었다. 동 계획은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empowerment)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고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 3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결과인 파리 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은 개발협력의 우선순위로 성평등을 추구하도록 하는 주요한 기제이며, 수원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도구이다. 이 같은 고위급 회의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OECD/DAC는 작년 말, 파리 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에 입각하여 성평등 지침서를 채택한 바 있다. OECD/DAC는 1998년 성평등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MDG 및 원조 효과 등의 발전된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 지침서(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를 개발한 것이다. 동 지침서는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해 (1) 성평등을 위한 공여국 간의 조화, (2) 성과 중심적 개발협력, (3)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 지침서에 반영된 제2, 3차 고위급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ECD/DAC 성평등 추가 지침서에 반영된 파리 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1. 주인의식(Ownership)

- 수원국이 빈곤감소전략(PRS) 수립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베이징행동강령과 같은 기존 성평등 국제 협약을 반영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 중심적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AAA, 13(c))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성 인지적 개혁을 추구
- 수원국 정부 부처, 의회, 지방 정부, 시민사회 및 사기업과의 협력
-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분석 지원(AAA, 23(a))

2. 일치(Alignment)

- MDG 3, 베이징행동강령, CEDAW,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 등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에 관한 국제협약과 수원국 국내법 및 성평등 정책 등을 적극 활용(AAA, 13(c))
- 정책대화의 성 인지성 모니터링, 수원국의 젠더 전문가 활용 및 육성
-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행을 통해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부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의 국가 예산 감시 역량 강화

3. 조화(Harmonisation)

- 국별 및 분야별 성 분석, 성 인지적 감사 및 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타 공여국 및 수원국과 공동 수행
- 해당 수원국의 성평등 분야에 대한 타 공여국의 전문성 활용
- 공여국 간 공동지원전략에서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 조치를 담보

- "DAC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에 따라 원조 효과성을 위협하는 취약 상황에 놓인 여성에 대한 보호 및 개발 과정에의 참여 보장(AAA, 21(b))

4. 성과 중심적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수행평가 및 분야별 모니터링에 성평등 및 여성권한부여 추진 지표 포함
- 성별분리통계 생산, 보급 및 활용(AAA, 23(a))

5. 상호책임(Mutual accountability)

- 개발협력 분야의 성 인지성 담보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NGO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책 대화 참여방법의 확대(AAA, 13(a, b))
-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구의 시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AAA, 14(a))
- 성 불평등과 여성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성평등의 개발 효과를 의회가 인지하도록 함
- 개발협력 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및 여성권한부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 성평등 및 여성권한부여에 투자되는 ODA의 규모 파악
- 파리선언 이행 과정에서 성평등 및 여성권한부여를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AC 동료검토를 적극 활용
- 다자기구의 성 인지적 개발협력 도모

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가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직결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성 인지적 관점의 계획과 평가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OECD/DAC은 오는 2010년 각 공여국이 성평등을 목표로 하여 집행한 개발원조에 대한 특별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제 당당히 공여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아크라 고위급회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성평등과 여성권한부여를 목표로 하는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 오는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 효과 고위급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아크라 회의의 성과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요구된다.



도미니카 공화국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문화개선 KOICA 사업 - 제1차 초청연수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김 영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장

들어가며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를 우선개발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빈곤여성 건강 및 인권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임신예방 사업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청소년으로, 10대 여성 중 20%가 출산이나 임신경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영아 사망률 및 산모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특히 산모 사망률은 5명 중 1명이 10대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산모사망률 및 청소년 임신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의 임신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수탁과제로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주무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원이 담당하게 될 사업의 세가지 주요활동은 첫째, 도미니카 공화국 내 청소년 성교육문화센터의 건립, 둘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연수, 셋째 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현지모니터링 및 사업평가로 구성된다.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에서 추진될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과정이 될 국내초청연수교육은 제1차 관리자 대상, 제2차 교육담당 강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연수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국내연수 과정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성교육 관련 분야의 선진적인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방법론 연수 및 교육컨텐츠 개발, 성문화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노하우 등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글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성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한 관리자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본원이 실시한 제1차 초청연수사업의 결과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1차 초청연수 - 도미니카 공화국 성교육문화센터 설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

두 차례의 초청연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의 성교육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지 문화에 적합한 청소년 대상 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의 성교육문화센터 방문 견학을 통하여 성문화센터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얻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1차 국내초청연수는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부와 보건부 관리자 12명이 참가하여 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연수내용은 전문 강의와 연수 참가자와의 워크숍, 성교육문화센터 현장 견학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Edutainment의 철학, 성교육 체험관의 개발 및 발전과정, 성교육 상담자 양성교육, 지역청소년 성교육관 수립과정 및 가톨릭 관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 소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증진을 위한 성교육 등을 주제로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현황과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다양한 성교육 체험관방문은 시설 설계뿐만 아니라 센터관리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 강사양성 등의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토대로 도미니카 공화국 실정에 맞는 성교육체험관을 구상하는데 기초적이고도 체계적인 이해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성생식 보건 및 청소년 성교육 현황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심도 깊은 워크숍을 진행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교육 현황과 성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발표와 함께 한국의 성교육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소년 성생식 보건정책 현황에 대한 발표로는 청소년 성 관련 법제도와 국가전략, 도미니카 공화국 보건부의 미성년·청소년 프로그램의 사업 및 활동성과, 도미니카공화국의 청소년 지역활동 성과와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가자 발표를 포함함으로써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련분야정책 및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성교육문화센터 방문결과에 기초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철학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해 논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국의 성교육체험관 방문을 토대로 현지 문화에 맞는 성교육문화센터 건립방안에 대하여 조별로 나누어 직접 구상하고 발표하는 심층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선진적인 정책과 제도 현황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체험관 견학에 참가하였다. 견학기관으로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와~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수련관, 늘푸른 여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포괄하여 청소년들이 형식적인 성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체험 교육의 현장을 폭넓게 경험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연수생들은 아하! 청소년문화센터의 청소년 성교육 상담 프로그램과 이동식 체험관인 해피버스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탁틴와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광진청소년수련



관에서는 연수생들이 직접 청소년들이 되어 한국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성교육을 체험해보기도 하였다. 전국 유일의 10대 여성 지원 전문기관인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십대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성교육 문화센터 방문 견학을 통하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체험교육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성교육체험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1차 연수과정의 참가자 평가 결과, 워크숍과 방문견학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과정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응답했다. 강의보다는 연수자와의 토론시간,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의 워크숍 및 토론 시간, 청소년이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의 대화시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차 연수과정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로는 성교육센터의 모니터링 및 평가, 성교육 교수법, HIV/AIDS 예방, 포래집단 압력, 여성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제1차 연수평가 결과에 따라 제2차 연수과정의 참가자대상, 시기 및 내용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제2차 연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교육문화센터의 실제운영에 참가하게 될 성교육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보다는 교육기관에서의 집중적인 현장교육을 위주로 한 2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2차 초청연수,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집중 현장 교육

제 2차 초청연수는 7월 19일부터 8월 3일간 2주간 과정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설립될 성교육체험관을 직접 운영하게 될 실무진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 성교육 분야의 주축인 탁틴내일여성센터와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연수생들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탁틴내일여성센터에서는 성교육체험관을 섹션별로 나누어 섹슈얼리티, 사춘기의 성, 임신/출산/피임, 이성교제, 사회 속의 성문화, 성적 의사결정 훈련에 대한 교육방법을 배우고 교육매뉴얼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유아대상 성교육 인형극, 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 버스성교육, 장애인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등 한국성교육체험관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자원봉사교육과 모집, 강사양성, 교사와의 네트워크, 운영전반에 관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캠프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탁틴내일여성센터와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집중적 교육과정 외에 광진청소년수련관, 창동청소년수련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전반적으로는 연수 과정을 통해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외교적 파트너십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성문화센터 운영진들과의 면담을 통해 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얻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관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도미니카 공화국 청소년 성교육 및 전문가 교육훈련에 활용할 각종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며 청소년 성생식보건센터 설립과정과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성교육 전문가를 파견하게 된다.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부는 2009년 4/4분기중 센터의 콘텐츠 및 디자인 완료, 2010년 2/4분기중 인테리어 리모델링 완료, 2010년 3/4분기중 센터 개원을 약속하였다.

본원에서 개발한 성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연수과정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소년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전담 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도미니카 공화국의 10대 청소년 여성 임신예방과 낙태예방, 질병예방 나아가서 성과 관련된 여성의 질병예방과 여성의 인권신장으로 연계되도록 기대된다.

나가며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문화센터의 설립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 향후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내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경험을 토대로 현지의 실정에 맞는 성교육문화센터의 설립과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사업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성부와 우리나라 외교채널의 적극적인 협조와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초청연수는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여성인권 및 생식건강 관련 양국 전문가의 교류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가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여성지위의 향상과 여성보건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개발원조사업의 모범사례로 이 지역에서의 동사업의 성공은 인근 중남미 국가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사업실행을 맡고 있는 본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기대된다.

[그림 1] 도미니카





“시아 법”과 젠더

- 아프가니스탄 “시아 법” 논쟁을 중심으로 -

곽 숙 희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시아의 지위에 관한 법(Shia Personal Status Law)”, 일명 “시아(shia)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의 제정과 집행을 두고 시끄럽다. 소위 “시아 법”은 젠더관점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다. 왜냐하면 이 “시아 법”은 일종의 여성차별 법으로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시아 법” 조항 중 ‘결혼한 부부의 성적 관계에 대한 조항’은 ‘결혼중의 여성 강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째, 최근 이슬람 세계를 중심으로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소위 “시아 법”을 중심으로, 젠더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 “시아 법”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와 전통의 관점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인권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의 초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시아 법” 제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 더 나아가서 정치적 파장이 무엇인지 조명해 보면서, 이러한 시아법의 논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반성해보려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1. 젠더관점에서 본 “시아 법” 조항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시아 법”의 조항은 크게는 결혼 중 성적관계, 여성의 이동권,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시아 법” 중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항은 결혼중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조항이다. 즉 시아 법 제 132조는 “결혼중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아프지 않는 한 혹은 성적 관계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 한, 자신의 아내와 매 4일 마다 성적 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의 성적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시아 법은 결혼중의 강간을 정당화하는 법으로서 특히 인권 활동가를 중심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둘째, 시아 법 제 177조는 아내는 복종과 성적 관계에 응할 준비, 남편의 허가 없이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내의 의무이며, 이중의 하나라도 위반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시아 법 제 133조는 집밖으로의 여성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 바, 여성은 아프거나 비상사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의 허가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시아 법 제 27조는 여아가 초경을 하였다면, 여아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여아의 결혼을 허락하였다.

이 밖에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 역시 자동적으로 남편과 남편의 아버지인 조부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¹⁾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는 것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2. “시아 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

이러한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명시한 법조항으로 인해서 “시아 법”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아 법을 둘러싼 입장들을 요약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시아 법을 둘러싼 비판은 무엇보다도 시아 법이 아프가니스탄 헌법의 남녀동등권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즉 시아 지위에 관한 법(Shia Personal Status Law)은 직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헌법 제 22조에 여성과 남성은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는 조항에 명백하게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이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아 법이 입법화가 확정된다고 해도, 헌법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좀 더 강경하게 시아 법의 시행은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였던 탈레반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전부를 가리도록 부르카(burqas)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여성들이 남성들의 가족구성원을 동반하지 않는 한 집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아의 학교교육은 물론 여성의 외부활동을 금지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 환자를 병원에서 돌보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해고하였다. 그러나 탈레반 붕괴이후 여성들은 학교는 물론 병원, 공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외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아 법의 제정은 바로 현재의 상황을 탈레반 시대로 되돌리는 여성 억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인권활동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이러한 인권활동가 중심의 시아 법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시아 법은 단지 무조건적으로 비판만을 할

¹⁾ USAID, 2009, April, English Translation Shia Personal Status Law, USAID.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이 발전하게 된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법조항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 시아 법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규정인 파이카(Fiqh)를 법으로서 명시화하는 과정의 일종이다.²⁾ 즉 시아파의 종교적 교조라고 할 자파리(Jafaryia)를 시아파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³⁾ 더욱이 이러한 법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에게만 해당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종교적 교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아 법은 사실은 전 근대적 농경사회의 도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 근대적 농경사회에서 타당했던 도덕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대사회의 척도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아 법에 대해 문화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입장이다.

넷째, 이러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보다 더 국수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종교적 전통을 존중하는 시아족의 입법화에 대해서, 외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시아의 남성 뿐 만 아니라, 시아의 여성들도 이러한 법의 제정과 더불어 이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외국의 간섭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⁴⁾ 심지어 시아 법은 오히려 서구의 법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더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것은 여성의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느냐는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아의 법이 여성 차별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특히 이는 시아 법을 입법화한 시아파 법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입장이다.⁵⁾

3. “시아 법” 입법화의 정치적 함의

이러한 시아 법은 여성관련 법 조항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혹은 문화론적인 해석으로 인한 논쟁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이 시아법 제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아프가니스탄 내부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국제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아 법”의 모든 법적인 조항에 대한 분석보다는 여성과 관련된 몇몇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시아 법”은 여성인권 차별법으로서 치부되고 있으며, “시아 법” 지지는 곧 반여성적, 반인권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서방언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특히 시아파를 중심으로 “시아 법”의 입법화 지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와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것은 소위 서방세계가 주장하는 가치와는 거리를 둔다는

2) <http://www.religionfacts.com/islam/sects/shia.htm>

3) 시아와 대비되는 아프가니스탄 다수 종족이라고 할 수니(Sunni)는 하니파 학파(Hanifa school of Law)에 소속 되어 있으며, 이들은 수니의 법적인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다.

4) Patrick Cockburn, 2009 May 2, Afghan clerics threaten protests if marital law is amended: Shia minority determined to defend the first legislation to enshrine their rights The Independent, May 2 2009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afghan-clerics-threaten-protests-if-marital-law-is-amended-1677668.html>

5) Yonhap No 0725, 2009, April, 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411205539831g1&newssetid=1352>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소위 “시아법”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곧 단지 여성인권의 차별이나 아니냐를 넘어서서,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느냐, 아니냐로 간주되고, 정치적으로는 서방 세계에 의해서 주입된 가치로서 여성인권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서방세계와의 거리를 두느냐라는 입장으로 간주되는 등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 2009년 8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이 “시아법”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곧 특정한 정치적인 선택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직으로 있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가 선거용 전략으로서, 시아파의 보다 많은 지지를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아법 제정 및 시행은 단지 시아에게만 해당되겠지만, 이러한 입법화 사례는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종족에 의해서 요구될 유사한 법에 대해서도 회자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많은 종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종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선부른 선택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만일 이 “시아법”이 현재의 형태로서 시행된다면, 이는 동시에 소위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고 있는 서방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히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는 최소한의 여성 인권이 보호받지 않는 국가를 위해서 더 이상 자국의 젊은이를 파병하여, 희생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시아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계기로 이들 서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의 지원 축소나 중지 등에 대한 대외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결국 “시아법”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이러한 정치적 함의 때문에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시아법”은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에 응대해서 법무부에 재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시아법”이 현재의 형태로서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현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후 5년간 대통령으로 연임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지가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인가라는 계산이 배제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시아의 지지를 획득하느냐 혹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획득 하느냐 라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시아법”의 최종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특히 시아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 역시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귀로에 서있는 셈이다.

마치는 말

시아 법은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으로 인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아



법”의 시행여부와 관련해서 “시아 법”의 여성 관련 조항들은 계속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즉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존중할 것인가라는 소위 서방의 가치 대 이슬람 가치라는 논쟁이 이 “시아 법”을 중심으로 다시금 불붙고 있다.

이슬람의 문화는 물론 이들의 종교와 법이 낳 설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아 법”의 논쟁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전더 관점에서든 문화론적인 관점에서든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물론 이슬람 세계에 대한 문화나 종교, 이들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선부르게 판단하거나, 단순히 비판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적인 법조항의 폐지와 수정, 입법화의 과정에서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논쟁 중의 하나로서 여성 인권차별 조항들은 종종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조항 폐지는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해석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한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여성 인권을 위한 발전은 종교, 문화와 가치, 언어와 생활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에서든 아프가니스탄에서든 이러한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아법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확정되고, 어떻게 적용, 시행될 지는 계속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 · 고 · 문 · 헌

- USAID, 2009, April, English Translation Shia Personal Status Law, USAID.
- Patrick Cockburn, 2009 May 2, Afghan clerics threaten protests if marital law is amended: Shia minority determined to defend the first legislation to enshrine their rights The Independent, Saturday, 2 May 2009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afghan-clerics-threaten-protests-if-marital-law-is-amended-1677668.html>
- <http://www.religionfacts.com/islam/sects/shia.htm>
- Yonhap No 0725, 2009, April, 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411205539831g1&newssetid=1352>